민주 경선 3인 압축… '이합집산' 통해 세 결집

광주 광산구청장

박병규·윤난실·최치현 경선 앞두고 지지선언 등 막판 분위기 달아올라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광산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무주공산'이 된 차기 구청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애초 7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 가운데 박병규 전 광주 경제부시장과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 비서관,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인 경선으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컷오프된 후보와 진영이 공개적으로 경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 선언에 나서는 등 막판 경선 분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박병규 예비후보는 박시종 전 예비후보 측의 지지선언을 받았고, 윤난실 예비후보는 김학실 예비후보, 최치현 예비후보는 윤봉근·이영순 예비후보의 지지선언을 받으면서 예비후보들 간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형일자리 설계자'로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바탕으로 '광산을 뉴딜 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오랜 기간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했고,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내면서 산업과 행정을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그는 광산구의 3대 비전으로 ▲드림 광산, 꿈을 함께 실현하는 광산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산 ▲새롭게 발전하는 광산을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경남도청 사회혁신추진단장과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등을 지내며 지방자치 행정 경험과 국정 경험 등의 경륜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윤 예비후보가 광주 첫 여성 구청장 탄생의 기록을 쓸 지 주목하고 있다. 그는 ▲생활복합문화센터 5개 설립 ▲금호타이어 부지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교육 명품도시 광산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병규

윤난실

최치현

최 예비후보는 민선 5·6기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들과의 소통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그는 지방자치 경험을 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면서 구정과 국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민자치 ▲공공부문부터 탄소중립 실천 ▲존엄 속에서 살 권리 보장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도농복합, 다문화도시 지역자원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현 청장 공천 낙마…민주 경선 결과 최대 관심

광주 서구청장

민주 경선 김보현·김이강·황현택 '팽팽'

광주 서구청장 지방선거는 광주 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치고 있고, 27일 현재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사실상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확정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서대석 현 구청장이 공천에서 낙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또 경선에서 배제된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판세가 유동적이다. 현역인 서대석 서구청장의 표심도 어떤 후보로 쏠릴지 관심이다.

민주당 경선에는 김보현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대변인,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 황현택 광주시의원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김보현 전 국가균형위 대변인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바탕으로 광주시의회 재선,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풀뿌리 정치와 중앙정치를 두루 섭렵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에 도전해 서 청장(44.32%)에 이어 2위(28.98%)를 득표할 정도로 당내 조직력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김이강 전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대외협력관을 역임한 뒤 광주시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비서실장, 정무특보, 대변인을 연이어 거치면서 시청을 비롯해 공직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평가다.

황현택 시의원은 서구의회 재선 출신으로 의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지역 내 신망이 두터운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구 내 조직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후보 광주공동선대위원장과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맡았다.

김보현

김이강

황현택

앞서 경쟁을 펼치던 일부 예비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거나 출마를 접으면서 서구청장 민주당 경선 셈법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현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들의 지지세가 팽팽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탈락 후보들이 특정 경선 예비후보 손을 들어주면 경선 결과도 요동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무소속 정종순 군수, 민주당 후보와 '한판 승부'

장흥군수

김성·곽태수·신재춘·김순태 민주 경선 민주 탈당 사순문 무소속 출마 저울질

장흥군수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잡음 탓에 공천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다. 오는 5월 초순께 민주당 후보가 가려지면 무소속인 현 정종순 군수와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장흥군수는 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만큼,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소속 정종순 현 군수는 농협 전문인 출신답게 농업인들과 노령층에 두터운 지지층을 기반으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정 군수는 민선 8기에 "노인공경 복지구축, 탐진강 30리길 국가정원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단없는 12대 전략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면서 "장흥을 대한민국 스포츠메카와 소방안전 중심지로 조성하고, 친환경 농림축수산을 육성해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는 민선 6기 군수를 역임한 김성 후보와 곽태수 전남도의원이 여론조사 오차범위내에서 경선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재춘 전 전남도청 중소기업과장과 김순태 중소기업청에서 근무했던 관료출신 등 4명이 경선에 뛰어 들었다. 이밖에 경선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주당을 탈당한 사순문 전남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김성 전 군수는 국회의원 비서관, 도의원(2선), 군수까지 30년 이상을 정치와 행정경력을 바탕으로 인지도, 튼튼한 지지기반 장점을 내세워 전국에서 유일한 "어머니 품 같은 장흥" 슬로건으로 군수 탈환을 노리고 있다.

곽태수 도의원은 30대 마을이장을 시작으로 마을금고 이사장, 군의회 의장(2선), 도의원 등 30년 이상 밑바닥 생활정치로 지지기반을 쌓아오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왔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김성

곽태수

신재춘

김순태

사순문

정종순

"검찰개혁법안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 윤 당선인 측 제안에 "위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법안(검수완박)과 관련, 취임 뒤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인명부 작성 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재외국민의 투표인명부 작성을 다룬 조항으로, 국민투표를 한다고 공고한 시점에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재외국민이더라도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어야 투표인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2015년 12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명하고,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당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새로 고치기 전에는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시, 자치구의원 정수 확정

시의회 의결, 광산을 1명 추가 69명

광주시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가 기존 68명에서 1명 늘어난 69명으로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대선거구제(선거구별 3~5인 선출) 시범 실시 지역인 국회의원 광산을 선거구에서 광주지역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1명을 추가로 증원해 69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산구 다·라·마 선거구 구의원 수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으며, 선거구별로는 다선거구(첨단1동·첨단2동)는 현행 4명에서 3명으로, 라선거구(신가동·신창동·비아동)는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마선거구(수완동·하남동·임곡동)는 2명에서 3명으로 조정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